

전문가 칼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기대하며



이종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진입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5월 서정쇄신을 주창하면서 부정부패를 국가 안보와 같은 차원에서 엄하게 다루겠다고 한 다짐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간다.

우리는 창업 15년 만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위를 기록한 엔론(Enron Creditors Recovery Corporation)이 저지른 회계 부정 사건의 충격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01년 드러난 엔론 사건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기업의 도산이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회계제도의 근본적 개선책이 모색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분식회계를, 형량이 1급 살인죄에 못지않은 경제적 중범으로 규정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이 발표되어(2002년 7월 30일), 당시 엔론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킨링이 무려 24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 뒤인 2003년 밝혀진 대기업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미국에서 보다 훨씬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을 뿐이다.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의 건설은 사회의 도덕적 열개를 바로 세운다는 규범적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 나이(J. Nye)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부패가 개발도상국에서 행정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패가 경제성장의 기반 자체를 허무는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바르가바(Bhargava) 같은 학자는 1998년 우리 사회에 크나큰 고통을 안긴 IMF 구제금융 사태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개발연대 기간 동안 축적된 사회경제적 '부패'의 유산을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은 기업에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고 복지기관 등에 약간의 기부금이나 성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윤리경영이라 하여 당장 우리 사회에서 기업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erg) 그룹과 같은 경영철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또한 발렌베리가 모든 기업의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돈 벌 기회가 많은 부패 사회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손쉽고 안전한 부패의 길을 선택하려 들 것이 뻔하다. 부패가 만연할 경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가 모호한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오히려 기업 경영에서 위법·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경영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1년부터 새로이 도입·운영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IFRS)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부패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etal context) 속에서 발생한다.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 부문의 부패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 부문의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윤리경영 강조

리베이트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제약업계가 국제수준의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과 국제산업으로의 성장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업계 내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올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도(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보험급여삭제의 벌칙을 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오래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기업 온라인 서비스 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4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활동가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가동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활동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나 1년에 두 차례 내는 사업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서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고용노동부·지자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사회적 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짜 친환경 제품 '그린워싱' 관리·감독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그린워싱)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구체적 대상 및 실증,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친환경 위장제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범위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환경마크' 제도 운영



을 통해 제품 환경성 평가·관리 전문성을 축적해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에 근거한 친환경 위장제품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GRI, G4 가이드라인 한국어로도 번역 제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시, 'GRI 가이드라인' 사용률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작년 12월부터 G4 가이드라인을 4개국의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6개국의 언어(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크로아티아어, 중국어, 한국어)를 추가적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10개국의 언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사용률이 높은 나라의 언어'와 '번역서비스 제공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업윤리센터의 미국 기업윤리 조사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단체인 기업윤리센터(ERC)는 기업들의 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U.S.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기업 리더들에게 윤리경영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RC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6,400명이 넘는 직원들의 41%가 직장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2007년의 결과인 55%보다 하락한 수치였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의 60%가 최고 경영자 등 관리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직원들은 비윤리적 행위 중 26%는 그들의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약 12%의 비윤리적 행위가 회사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그린 인터넷' 구축 노력

그린피스의 최근 보고서('클릭클릭, 기업들이 그린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에 따르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인터넷을 작동시키려는 노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구글은 G메일과 유튜브를 포함한 서비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풍력 에너지 전력판매계약 이용을 선도하였고,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로 작동시키는 목표를 달성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

행사가
브리핑

UNGC 한국협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

반부패 분야 우수사례 지멘스

지난 18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한국지멘스에서 '제1회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UNGC 한국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여 회원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하였다.

반부패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내 반부패 관련 기준, 정책, 절차를 구축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준법경영을 내재화하여 최고의 반부패 기업으로 재도약한 지멘스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김종갑 회장(한국지멘스)은 기조연설에서 "167년 전, 지멘스 창업자인 베르너 폰 지멘스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를 팔지 않겠다고

선포하면서 이를 지멘스의 가치로 정착시켰다"고 밝혔고, "윤리경영이 기업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멘스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멘스 준법시스템과 실제 운용사례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UNGC 한국협회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4대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주제로 하여 기업 방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이번 호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에서는 유통업계의 비윤리적 경영과 그에 대한 대응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유통업체들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경영은 자사의 기업이미지, 명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협력업체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투명거래를 윤리경영의 실천과제로 삼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갑의 횡포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 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씁쓸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 악정을 쓰지 않거나 부당한 정보를 요구하고, 부당 반품이나 관촉비를 전가시키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례 갑의 횡포를 부리는 대형 할인점

국내의 한 할인점에 운동화를 납품해온 A업체는 해당 할인점의 납품업체 관리자가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 사용을 강요하며 다른 물류창고보다 10배가 넘는 이용료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마트 행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물론 종업원 고용료를 부당 청구하고 반품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업체 판매금지도 강요했으며, 납품업체 관리자가 회사 영업직원들을 불러내 술 접대와 유흥업소 접대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윤리적 행위에 무색해지는 상생협력

현재 유통업계에는 원청업체의 하청 직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입점 협력업체 직원의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원청업체가 부당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협력업체 직원의 매장 인원

교체, 임산부 교체, 여성 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연장영업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유통업 사내하도급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며, 이제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유통산업 전반의 비정규직과 고용구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례 기업의 이윤과 맞바꾼 비직영 사원의 인권

직영사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별도로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입점 협력업체 직원들은 한 휴게실을 몇 개 층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기업 매출을 위해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집중영업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휴게실조차 폐쇄하고 있다. 이들은 매장 내의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으며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고, '갑'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매장 스케줄 관리, 브랜드 PC 설치도 할 수 없다.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묵살당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이제 그만

많은 유통업체들이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 박자 느리게 따라붙는 규제에 대한 개혁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비윤리적인 횡포를 멈추게 하기 위한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당국도 다양한 규제 개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례 중대한사고예방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신고

A식품업체가 B계열사(총수 일가가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를 중간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아무런 역할 없이 수십억 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권익위는 이를 공정위로 이첩하였으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A식품업체는 2008년 1월부터 면과자류 제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자사의 B계열사를 거쳐 판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B계열사에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23억1천1백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A식품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27억 5천1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윤리경영 스테디

세계에 만연한 부패와의 투쟁을 향해
- 'EU 반부패 보고서'와 'TI 부패인식지수'를 바탕으로 -

이번 호 윤리경영 스테디에서는 유럽연합(EU) 28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첫 '반부패 보고서'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소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부패를 예방하는 반부패 논의를 촉구하고 반부패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반부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수행기관: 유로바로미터, 유럽연합 여론조사기관) 대상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뇌물수수부터 정치 부패, 기업간 부패 등 모든 부패 유형을 포괄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점수와 순위를 말한다. 이 지수는 신뢰할 만한 다양한 기관들의 부패 평가자료와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공무원의 뇌물수수, 공공조달에서의 리베이트, 공금 횡령, 반부패 정책의 강도 등과 관련하여 각 나라 공공 부문의 부패 인식 정도를 나타낸다.

EU 반부패 보고서와 부패인식지수에서는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의 남용(Abuse of power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하고 있다. EU 반부패 보고서는 유럽연합 국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반면, 부패인식지수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EU 반부패 보고서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패와 관련하여 사업군별 부패 만연 정도, 부패의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등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부패인식지수에서는 확장된 시야로 전 세계 각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비교하고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윤리경영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가이드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 윤리경영 체계 가이드스에서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다 체계적인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 조직

기업이 윤리경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에서부터, 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등 기업경영 전반에서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해야 효과적인 윤리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 운영원칙

독립성	윤리경영 관련 업무 수행 중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중립성	경영진·직원·주주 기타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해져야 함.
객관성	기업에 윤리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윤리상담실 등을 운영하여야 함.
공조/공생	기업의 모든 경영진과 사원 및 각 부서와 계열사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윤리경영 전담 조직의 구성과 역할

윤리경영 전담 조직은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와 윤리사무국, 윤리실천책임자로 구성된다. 우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는 회사 전반적인 윤리경영 관련 정책과 활동을 관장하며,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윤리관에 따라 설정된 윤리규범을 전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윤리사무국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윤리경영 부서로서, 윤리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다른 윤리경영조직(예: 감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이 있는 경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윤리담당부서를 두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타부서에서 함께 윤리경영 담당부서를 겸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윤리사무국의 구성원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리부서를 책임지고 지휘하기 위한 윤리실천책임자가 필요하다. 윤리규범만 선포해놓고 그 실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형식만 갖추었을 뿐이므로 윤리경영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윤리실천책임자의 위상과 능력에 따라 강력한 윤리경영 추진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업장의 부서장 또는 현장소장을 윤리실천책임자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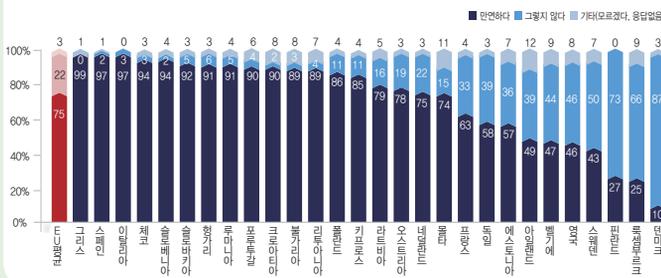
사례 K-water 윤리경영 전담 조직도



● 다음 호에서는 '윤리경영 감체계 운영'에 대해 이어집니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Q. 자신의 국가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패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에서는 자국에 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평균 75%의 기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그리스(99%), 스페인(97%), 이탈리아(97%), 체코(94%), 슬로베니아(94%)가 부패가 가장 만연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40점(80위),

스페인 59점(40위), 이탈리아 43점(69위), 체코 48점(57위), 슬로베니아 57점(43위)의 결과를 얻어 부패가 만연하다고 인식되는 국가에 속했다. 반면, EU 반부패 보고서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국가들은 덴마크(10%), 룩셈부르크(25%), 핀란드(27%), 스웨덴(43%), 영국(46%)이 있었으며, 이 국가들은 부패인식지수에서도 덴마크 91점(1위), 룩셈부르크 80점(11위), 핀란드 89점(3위), 스웨덴 89점(3위), 영국 76점(14위)으로 가장 청렴한 국가의 축에 속했다. 유럽연합 내에서 청렴한 국가로 인식되는 국가들이 세계에서도 청렴하다는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반대로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 또한 두 자료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55점을 받아 177개국 중 46위를 차지하였다. 2012년도의 56점, 176개국 중 45위라는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였다. 이는 부패한 사건들에 관한 대중적인 대처 방법만으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Q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비해 부패인식 지수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청렴하다고 평가되는 국가는 어디이며 반부패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A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청렴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CPIB)이라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총리 직속에 두고 공직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패행위 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IB는 규제완화, 재산공개 등의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970년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의 심각성 때문에 홍콩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이에 강력한 부패조사 기관인 염정공사(ICAC)를 설립하였고, ICAC는 홍콩시민들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패 혐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고 계좌 추적도 가능하며 수사에 관련된 정보요구를 거부할 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선심성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검사에 대한 적부심을 거쳐 파면 및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홍콩은 청렴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Q 영국 뇌물수수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OECD 뇌물방지협약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Bribery Act vs FCPA vs OECD

	영국 뇌물수수법 (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OECD 뇌물방지협약
강도	■■■■■	■■■■□	■■■□□
범위	외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뇌물 공여도 처벌 대상에 포함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처벌 대상 (회계 관련 조항도 있음)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처벌 권고 (협약국에 한함)
특징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없음 벌금 최고한도 없음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 있음 2백만달러 이하의 벌금	협약국간 상호점검 및 구두·서면보고 등 독려 압력

출처: 전국제인연합회 (2014. 3. 20)

세 법규 중에 가장 최근 제정된 영국 뇌물수수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무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보다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국 뇌물수수법의 처벌 수위도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벌금에도 최고 한도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부패 관련 해외 규범의 적용 범위와 수위가 나날이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영국 뇌물수수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국제 협약인 만큼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및 자율점검 핵심실무 설명회

기업들의 근로감독, 자율점검제도, 근로계약체결 및 근로시간의 법리 등 윤리적이고 건전한 노무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주최 : 구로구상공회
- 일시 : 2014년 5월 21일(수)
- 장소 : 서울 구로구 코오롱사이언스밸리 2차 7층 713호 (에듀윌 드림교육센터)

2014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전국 설명회

기업이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

- 주최 : 환경보전협회
-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23일(금)
- 장소 : 대전충남본부 덕수실(22일) / 서울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23일)

Walking the Talk: Sustainability i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기업 관리자들이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EthicScan Canada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
- 장소 : Toronto, Canada

Responsible Supply Chain Solutions

공급사슬과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기업들의 사례와 중소기업이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주최 : Sedex Global, Schlange&Co.
- 일시 : 2014년 5월 20일(화)
- 장소 : Maritim Hotel, Frankfurt, Germany

Q 기업이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다음 중 윤리경영 전담조직 운영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1) 공조/공생 2) 주관성 3) 독립성 4) 중립성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4번, 부패인식지수**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담당자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세요.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시종택님, 정서윤님, 이효정님, 장유미님, 정현상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당장연행해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종만)

기업윤리 브리프스 “웹진”!!

보다 신속한, 보다 상세한 윤리경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기업윤리브리프스를 웹진(에메일)과 브로슈어(웹진 요약본)로 발간하여 기업 관계자, 학계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웹진 신청방법

- ▶ did911@korea.kr 로
소속, 성명, 이메일주소를 보내주세요
- ▶ 제작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
(02-360-2772, 2774)주세요
- * 단체 신청 가능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